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ww.kicce.re.kr 보 도 일 시	보 도 자 료		
	작 성	담당부서	출판홍보팀
		담 당 자	김혜진 팀장(☎02-398-7729)
	배 포	담당부서	출판홍보팀(☎02-398-7740)
일 시		2026년 5월 12일(화)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정책포럼」 통권 제87호 발간

< 주 요 내 용 >

- ☐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영유아기의 건강격차 문제를 조명하고,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육아정책포럼」 통권 제87호를 ‘영유아기 건강형평성’을 주제로 기획·발간하였다.

✓ 권두언

- 아동 건강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 / 황옥경(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집중조명

- 영유아 건강형평성의 추구: 현황과 정책 / 김은설(육아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 영유아기 건강불평등 현황: 모니터링 지표를 중심으로 / 정최경희(이화 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정책동향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의 주요내용 / 박은정(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주요 원고 요약

아동 건강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황옥경(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아동기의 건강 격차는 교육, 노동시장 참여, 사회적 이동성 등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특히 영유아기의 건강불평등은 이후 삶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동 건강형평성은 단순한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초기 발달, 가족 환경, 사회경제적 조건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생애초기 개입 및 통합서비스 사례를 참고하여, 모든 아동에게 기본 서비스를 보	

장하되 필요 수준에 따라 지원 강도를 달리하는 ‘비례적 보편주의’ 관점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 건강정책은 보건·복지·교육 영역 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주의 중심 구조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분절적 서비스 운영으로 인해 통합적 통계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어려워 정책효과 검증과 사각지대 발견에도 제약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예방 중심의 조기개입과 생애초기 지원 강화, 보건·교육·복지·지역사회 서비스 간 연계 강화, 데이터 기반 정책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아동 건강형평성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영유아 건강형평성의 추구: 현황과 정책

김은설(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건강형평성 개념에서 보면 건강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소득, 교육, 지역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계층 간 건강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기는 생애 전반의 건강과 발달을 결정짓는 시기로, 이 시기의 건강불평등은 장기적 사회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건강검진, 영양지원, 예방접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강형평성 관점에서의 효과 점검과 보완이 요구된다. 향후에는 건강형평성 지표 개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영유아기부터 건강 불평등이 고착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중요하다.

영유아기 건강불평등 현황: 모니터링 지표를 중심으로

정최경희(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영유아기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건강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추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본 고에서는 26개 대표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해 국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사회구조요인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출생아 1명당 공공지출액은 OECD 하위권이며, 한부모 및 저학력가구의 영유아 빈곤율이 높았다. 중개요인에서는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가구에서 주택 및 주거환경 박탈률, 영유아 결핍 경험률, 주양육자 우울 경험률,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높고, 양육자-아동 상호작용 행동점수와 영유아 건강검진율이 낮았다.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담 사업인력 수,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도달률, 국가 필수 예방접종 완전 접종률, 영유아 건강검진율의 시도별 격차가 관찰되었다. 발달 및 건강요인으로 0-2세 영유아의 인지·언어·사회성 발달 미달률, 영양섭취부족아 분율과 에너지·지방 과잉섭취아 분율, 영유아 만성질환 유병률과 영유아 활동제약률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확인하였다. 영유아 사망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1.5배까지 높은 지역도 있었다. 향후 지표를 고도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영유아기 건강형평성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육아정책포럼 원문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육아정책포럼 제87호 파일 1부. 끝.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육아정책연구소 출판홍보팀 김혜진 팀장(☎ 02-398-77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